Vol. 36
주간

농업농촌식품동향

2022. 9. 13.

▮ 정책동향

-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확정
- 경제 규제혁신 방안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개(39%) 폐지·통합
-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액화석유가스(LPG) 이용·보급 시책」 수립 시행
- 국가 기후위기 적응연구 업무협약 체결
-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지원 주요 동향
- 농촌공간정비사업 본격 확대 추진
- 2023년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 공모
-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 정책」 추진계획
-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 사업설명회 개최
- 낙농제도 개편 방향에 합의

▮ 아젠다발굴

- **이슈 브리프** ❙ OECD 러-우 전쟁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함의
-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인도의 식량안보와 EU 간 관계
-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 **언론 동향** ❙ 농촌진흥청 개청 60주년 기념 주요 동향

▮ 통계·조사

-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 2022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

정책동향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확정

자료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2022.9.8.)

❑ 개요

○ [정부,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확정, 2022.9.8.] 정부는 2022년 9월 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법무부, 농식품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

※ 계절근로자 제도: 과수·채소류 분야 등 농업의 계절적·단기적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최장 5개월)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2015년~)

❑ 추진 배경

○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촌에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MOU 체결, 까다로운 근무처 변경 요건 등으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고용하기 어려운 실정

※ 계절근로자제 신청 기초지자체 수(개) / 배정규모(명): (2016) 6/241 → (2019) 50/3,612 → (2022)109/16,924

※ 계절근로자 현황: (2019) 3,612명 배정, 2,984명 참여 → (2022) 16,924명 배정, 6,233명 참여 (2021.7.31일 기준)

- 특히, 계절근로자 및 고용허가제 입국 인원이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급감※하여, 농촌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

※ 계절근로자 입국 인원(명): (2019) 2,984 → (2020) 0 → (2021) 538

※ 고용허가제 입국 인원(명): (2019) 51,365 → (2020) 6,688 → (2021) 10,501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체류 인원: (2019년 말) 277천 명 → (2021년 말) 218천 명(약 5.9만 명 감소)

- 또한, 최근 법무부가 계절근로자제 배정규모를 확대하였으나 실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는 적은 실정※

※ 계절근로자 입국인원(명) / 배정인원(명): (2019) 2,984/3,612 → (2020) 0/4,917 → (2021) 538/6,216 → (2022.7.31. 기준) 6,233/16,924

❑ 주요 내용

1. 기존 지자체별로 체결하던 MOU 추진 방식을 개선하여 지정기관에서 기초지자체의 MOU 체결 지원

○ 현재 기초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개별적으로 MOU를 체결하여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고 있으나, **체결 과정**에서 **과다**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일부 국가**로 **MOU 체결**이 **집중**되는 등 계절근로자 도입단계부터 계절근로자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유치**하는데 **차질**이 발생

○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의 **MOU 체결업무**를 포함한 **계절근로자 유치·관리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

2.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 계절근로자제를 활용하는 지자체와 인력 배정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와 **기관 간 협력체계**가 **미흡**※한 실정

※ 계절근로자제 운영 관련,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1의2)」에 근거한 사증 규정만 있을 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 법무부 내부지침으로 운영 중

○ 이러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운영**의 **법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에 **마련**하고,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농업인력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

- 또한, **법무부**에 부처·지자체 **인력**을 **파견**하거나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도 **강화**할 예정

- 나아가, 농촌 현장에도 계절근로자 고충 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국내 외국인커뮤니티-주한 대사관** 등과 **계절근로자 협력네트워크**를 **구축·지원**

3.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 가능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조기 확대

○ 현재 시범실시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가가 하루 단위로 계절근로자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어 **농가**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농작업 대행 방식으로 노동력을 제공(농협법 제57조 제1항)하는 사업으로, 무주군·임실군·부여군·진안군·아산시 5개 지자체에서 166명의 외국인을 도입·운영 중(2022.7월 기준)

○ 2027년까지 17개 지자체로 순차적으로 확대하려던 당초 계획을 앞당겨 2024년까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조기 확대

4. 근무처 변경제도 허용 범위 확대 및 변경 수수료 면제

○ 농가가 계절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도 변경 요건이 엄격하고, 변경 시에도 수수료(6만 원, 계절근로자 부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계절근로자 고용의 유연성·탄력성이 낮다는 현장에서의 지적이 지속

○ 이런 지적을 반영하여, 계약기간보다 근로가 조기 종료된 근로자를 공공형 계절근로제 인력으로 흡수해 고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

- 또한, 정당한 사유로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하고, 계절근로를 신청한 고용주간 서로 인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품앗이" 방식을 도입하는 등 근무처 변경제도 허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

5.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인력매칭 및 홍보 기능 강화

※ 문화예술(D-1), 유학(D-2) 등 총 9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한해 2022.1.1일부터 상시적 계절근로(1주일에서 최대 5개월)를 허용

○ 정부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새로 입국하기가 어려워지자 심각해지고 있는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체류 중이나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들 중 일부에게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체류 외국인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

○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체류 외국인들의 계절근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내국인 대상으로만 근로 알선을 수행하고 있는 농촌인력중개센터※에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체류 외국인의 단기 근로 알선을 허용할 계획

※ 농식품부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지역 일손 부족현상 완화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2022년 155개소)를 설치, 전담인력 배치·구인구직 수요조사·인력풀 내에서 내국인 근로인력을 중개

- 이를 통해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축적된 내국인 인력의 알선·중개 노하우를 계절근로가 허용된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활용할 예정

- 또한, 계절근로가 가능한 외국인에 대한 **인력 DB**를 **구축**하고 **지자체 및 농촌인력 중개센터** 등과 **공유**하여 농가와 계절근로자 인력 매칭에 활용하는 등 **타겟별 맞춤형 홍보**도 **강화**할 예정

6. 무단이탈 가능성을 낮추고 성실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인력관리방안 마련

○ 최근 계절근로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 가능성**이 **높아**지고, 계절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 관리**가 **미흡**한 실정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자체에서 계절근로자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인력관리플랫폼**※을 **구축·보급**하여 **인력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

※ ▲입국, △체류기간, ▲작업장 배치(지역·농가·품목), ▲계약, ▲이력 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플랫폼에 입력, 실시간 확인·관리

-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여, **성실근로자**의 경우 체류기간을 **최대 5개월 내**에서 **연장**(現 E-8, 5개월 → 10개월 이내)하고, **계절근로자**(E-8) **자격**으로 장기간(5년) **성실히 근무**한 경우에 **농업 숙련인력 체류자격**(E-7-5)을 **부여**할 예정

○ 이뿐만 아니라, △**법무부 조기적응 프로그램**※ **활용**, △**계절근로자 입국 초기 교육**※※ 실시, △고용주·계절근로자 대상 교육 표준 매뉴얼 제공, △맞춤형 교육 강화 등 **근로자**와 **고용주 대상 교육프로그램**도 **내실화**할 예정

※ 해당 외국인 언어별(총 13개)로 대한민국 기초 법·제도, 필수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 교육프로그램

※※ 기초법·질서, 한국사회 적응정보, 계절근로자 필수정보 등을 교과목으로 편성, 근로자 본국 언어로 강의

◈ 총괄 동향

경제 규제혁신 방안

자료 : 기획재정부 · 관계부처 합동(2022.9.5.)

❑ 개요

○ [기획재정부,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개최, 2022.9.5.]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2년 9월 5일, 제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과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및 「디지털 확산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데이터·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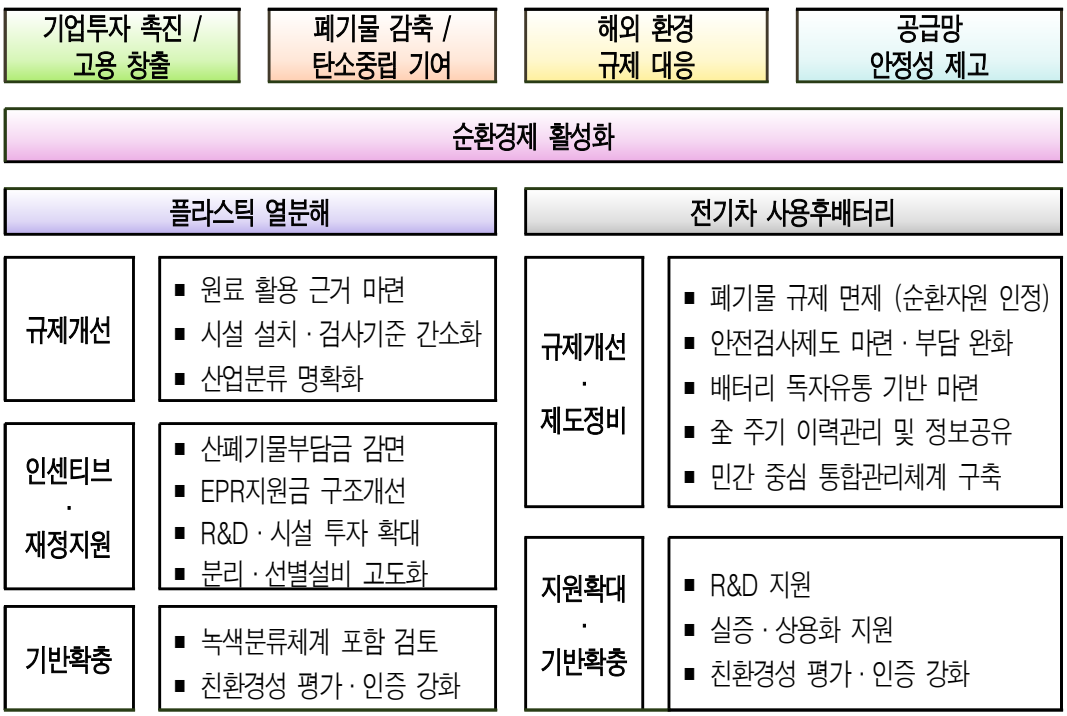
※ 참석자: 경제부총리(주재), 환경부 장관 등 관계부처, 민간위원

❑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 규제혁신 및 제도정비 + 인센티브 마련을 통해 **순환경제 산업 생태계 육성** → **신규 투자 촉진** 및 **탄소중립**에 기여

- 플라스틱 열분해 및 사용 후 배터리 등 유망산업별 정책과제 발굴

▌기본방향▐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장애로 및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36개의 신규과제 발굴

- (현장애로: 8개) 운송·물류, 건설 등 분야의 기업활동 확대, 부담 완화 등을 지원
- (신산업: 19개) 수소·전기차 등 미래차 확산 가속화, 무인선박 등 신기술 선박 육성기반 마련 등
- (기타: 9개) 환경검사 합리화,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개발 절차 간소화 등 환경, 보건·의료, 입지 분야 규제 완화

▌분야별 규제혁신 주요 과제 ▐

번호	정책과제	일정	부처
1 현장애로(8건)			
1-1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 확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개정)	2022.4분기	국토교통부
1-2	시외버스로 운송 가능한 소화물 규격 확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2022.4분기	국토교통부
1-3	3층 이상 가설건축물 축조 시 심의 규제 생략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2023.1분기	국토교통부
1-4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제도 개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2023.1분기	국토교통부
1-5	공사이행기간 단축 시 의무 감액정산규정 삭제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	2022.4분기	기획재정부
1-6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용물량 추가 배정 지원 (신·증축 허용량 배정)	2023.1분기	기획재정부
1-7	회전기계 안전덮개 안전조치 가이드 마련 (가이드 제작·배포, 기술지침 안내)	2022.4분기	고용노동부
1-8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겸직제한 완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2023.1분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신산업(19건)			
2-1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 허용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2022.4분기	산업통상자원부
2-2	전기차 무선 충전기를 형식승인 대상에서 배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23.1분기	산업통상자원부
2-3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기준 개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023.1분기	소방청

정책동향

2-4	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기의 충전 · 판매 허용 (전기사업법 개정안 제출)	2023.1분기	산업통상자원부
2-5	주유소 내 설치 가능 시설에 연료전지 추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	2023.1분기	소방청
2-6	수소차 충전소 충전대상에 실내물류운반기계 포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및 상세기준 개정)	2023.1분기	산업통상자원부
2-7	수소차 계량성능 평가장치 운용자 범위 확대 (수소자동차 충전소 평가장치 운용에 관한 특례기준 개정)	2023.1분기	산업통상자원부
2-8	수소차 셀프충전소 허용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 제출)	2022.4분기	산업통상자원부
2-9	주유소에 회수-액화 통합시설 설치 허용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형식인증검사 신청 안내)	2022.3분기	환경부
2-10	자동차용 액화천연가스 내압용기 설치기준 완화 (자동차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	2022.4분기	국토교통부
2-11	PE 소재 선박 검사기준 마련 (PE 선박 검사기준 마련)	2023.4분기	해양수산부
2-12	소형무인선박의 선박직원 승무 의무화 규정 완화 (소형무인선박 승무기준 특례 도입)	2023.1분기	해양수산부
2-13	소형무인선박 운용 관련 구조 및 설비기준 마련 (소형무인선박의 구조 및 설비 운용기준 마련)	2023.4분기	해양수산부
2-14	액화석유가스(LPG) 선박에 대한 건조기준 마련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마련)	2023.1분기	해양수산부
2-15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확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추가 지정)	2023.1분기	국토교통부
2-16	자율주행로봇 공원 내 출입 및 주행 허용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2023.1분기	국토교통부
2-17	법인택시기사의 법인차고지 밖 근무교대 허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	2023.1분기	국토교통부
2-18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이 다른 플랫폼 확장 시 효력 유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개정)	2022.4분기	문화체육관광부
2-19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 사업자 지정요건 등 완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2022.4분기	문화체육관광부

3 여타 분야(9건)

3-1	자동차연료 첨가제 재검사 시 배출가스 검사 생략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2022.4분기	환경부
3-2	통합관리사업장 폐수 허가배출기준 설정 합리화 (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22.4분기	환경부
3-3	신규 수질오염물질 발생 시 사후신고 절차 신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2022.4분기	환경부
3-4	벤조a피렌의 오염시험 결과표시에 대한 기준 마련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	2022.4분기	환경부
3-5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정보 게재 (의료법령 유권해석)	2022.4분기	보건복지부

3-6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 절차 간소화 (심평원 홈페이지 · 앱 개선,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2022.3분기	보건복지부
3-7	실시계획 상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2022.4분기	국토교통부
3-8	준산업단지 개발 시 절차 간소화 (산단절차간소화법 개정안 제출)	2023.2분기	국토교통부
3-9	풍력발전시설의 산지 일시사용 허가기간 연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2023.2분기	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자료 : 행정안전부(2022.9.6.)

❍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2.9.6.]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2022.6.10. 공포, 2023.1.1. 시행) 제정의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9월 7일(수)부터 10월 17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 이번 시행령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

- (주요 내용)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생활인구 등

> ■ 국가와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에 필요한 수립 절차, 제출 시기 등을 정한다.
> ■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중에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 ■ 법률에서 생활인구란 주민, 체류하는 자, 외국인으로 정의하며,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
> ■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조사 · 분석 · 연구, 지역 인구 활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 컨설팅 등을 수행하게 된다.

- (향후 계획)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장기 계획과 각종 특례 등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하고, 법에서 최초로 도입된 생활인구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연구하여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개(39%) 폐지 · 통합

자료 : 행정안전부(2022.9.7.)

❍ [행정안전부,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개 (39%) 폐지 · 통합, 2022.9.7.] 행정안전부는 정부위원회 636개(2022.6월 말 기준) 중(中) 유사 · 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약 39%)를 폐지 · 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하였으며, 2022년 9월 중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

※ 운영실적 저조, 단순 자문 성격 등 166개 위원회 폐지, 유사·중복된 80개 위원회는 他 위원회와 통합(134개 → 54개, △80개)

▌주요 부처별 위원회 정비 대상▐

구분	정비 이전	정비 이후	정비 대상			감축 비율 (%)
			소계	폐지	통합	
농림축산식품부	**26**	**9**	**17**	**14**	**3**	**65**
해양수산부	24	11	13	5	8	54
환경부	27	13	14	5	9	52
국토교통부	65	33	32	27	5	49
교육부	35	19	16	7	9	46
국방부	22	12	10	10	0	46
국무조정실	14	8	6	5	1	43
문화체육관광부	32	19	13	13	0	41
산업통상자원부	36	22	14	7	7	3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	19	11	4	7	37
중소벤처기업부	14	9	5	5	0	36
보건복지부	55	37	18	14	4	33
기획재정부	28	19	9	9	0	32
고용노동부	16	11	5	3	2	31
행정안전부	49	34	15	9	6	31

▌농식품부 정비내용▐

주관부처	정비 수	정비내용	
농식품부	17	통합 (3)	농림종자위원회 (→ 농림식품과학기술위),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 (→ 중앙가축방역수의심의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
		폐지 (14)	간척지운영위원회,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 농업기계화정책심의회,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 도시농업협의회, 중앙농업 · 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축산발전심의위원회, 해외농업 · 산림자원개발심의회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자료 : 행정안전부(2022.9.7.)

○ [행정안전부,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022.9.7.]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2022년 9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법안 주요 내용

○ [기부 주체/대상] 개인이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강제 모집 등 방지 위해 현재 거주 지자체는 기부 제한, 법인은 기부 불가, 개인 기부금 연간한도액은 500만 원(지자체 모금 한도액은 없음※)

※ (예시)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답례품] 기부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제공 가능, 지자체 간 과열 경쟁 방지를 위해 종류 및 상한선 규정※

※ 시행령에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

○ [기부금 운용] 기금을 별도 설치하여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사용, 지자체 조례 제정 및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운영 투명성 제고

※ 청소년 육성, 주민복지, 문화·예술·체육진흥, 공동체활성화 등

○ [모집·홍보] 기부금 모집을 위해 지자체는 광고매체에 의해 모금, 지자체 광고로만 모금- 홍보가 가능하며, 개별적 접촉을 통한 모금은 금지

○ [세액공제] 10만 원 기부 시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 16.5%※ 공제

※ (예시) 100만 원 기부 시 24.8만 원 공제(10만 원 전액 공제 + 초과 90만 원의 16.5%인 14.8만 원 공제)

○ [개인 및 기관 처벌] 기부 강요·모금 방법 위반에 대한 처벌

※ (개인) 기부·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기관) 법 위반 시 지자체의 모금·접수를 1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 & 위반 사실 공표

○ [향후 추진 일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2022.9월) ➔ 참고 조례안 안내, 지자체 교육, 대국민 홍보(2022.9~12월)※ ➔ 원스톱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행(2023.1.1.)※※

※ 지자체의 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 기부금 납부, 답례품 제공, 세액공제 연계 처리 등 서비스 제공(기부금 납부, 답례품 제공, 세액공제 연계 처리 등 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 비용(70억 원)은 243개 지자체 균등 부담(지자체별 29백만 원)

「액화석유가스(LPG) 이용·보급 시책」 수립 시행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22.9.7.)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 「액화석유가스(LPG) 이용·보급 시책※」 수립 시행, 2022.9.7.]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 이하 'LPG')의 5년간 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과 추진과제를 담은 '액화석유가스(LPG) 이용·보급 시책'을 발표

※ 동 시책은 LPG 수급 예측을 바탕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의2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LPG 수급 전망에 대한 분석과 LPG 업계, 유관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

- (주요 내용) △농어촌 읍·면 단위에 LPG 배관망 가스 인프라 확충, △수소 융·복합 충전소 전환 등 탄소중립 가교(bridge)역할과 LPG 선박 벙커링 등 신수요 창출 지원, △LPG 충전-판매업계, 「LPG산업 경쟁력 제고 및 상생 MOU」 체결

수요 전망

○ 국내 LPG 수요는 2020년 약 1,019만 톤 대비 2026년 1,111만 톤으로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

※ 자료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중기 LPG 수급 전망 연구」(2022.1월)

- 2020년 기준, 수요의 용도별※ 비중은 산업용(석유화학 등) 59.0%, 수송용 26.1%, 가정·상업용 14.9% 순으로 조사되었고, 제품별※※로는 프로판 64.0%, 부탄 36.0%로 조사

※ 용도별(2020-2026): ❶ 산업용 64.8%(+5.8 p%), ❷ 수송용 21.4%(-4.6 p%), ❸ 가정·상업용 13.8%(-1.1 p%)

※※ 제품별(2020-2026): ❶ 프로판 (2020) 64% → (2026) 67.7%,, ❷ 부탄 (2020) 36% → (2026) 32.3%

- 향후 5년간(~2026년) 수요는 전기·수소차 증가 및 LPG 차량 감소에 따라 수송용은 21.4%로 감소, 납사 대비 가격 경쟁력에 따라 산업용(석유화학 등) 수요는 63.5%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정책동향

❑ LPG 이용·보급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 분산형·보완 에너지인 LPG를 적정하게 활용하여, 서민들과 농어촌 지역주민들 삶의 질을 개선하는 3대 전략과 7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

▌LPG 이용·보급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목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LPG 이용 합리화
전략	◆ (인프라) LPG 배관망 인프라 확충 ◆ (유통/가격) 가격안정화, 유통질서 투명성 강화 ◆ (탄소중립) 융·복합 충전소 전환, 신수요 창출

3대 추진 전략	주요 추진과제 (7개)
1. LPG 가스공급 인프라 확대	① 농어촌 LPG 배관망 인프라 확충 ② LPG 혼소, 발전 등 에너지 안보 강화
2. LPG 유통, 가격 안정화	① 유통질서 투명성 강화 ② 가격안정화 기반 조성 ③ 유통구조 합리화 지원
3. 신수요 기반 창출 지원	① 융·복합 수소충전소 전환 등 ② LPG 선박 벙커링 산업 기반 조성

○ ❶ [LPG 가스공급 인프라 확충]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 LPG 배관망 구축 등을 통해 도·농간 에너지 사용 불균형 격차 해소와 사회적 배려계층(복지시설 등)의 에너지 복지실현에 기여토록 적극 지원할 계획

※ LPG 배관망 인프라 보급(농어촌 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회복지시설), LPG 기반 분산전원(도서지역) 연계 등

정책동향

- 이를 위해 기 추진 중인 **LPG배관망 구축사업**※(대규모: 군 단위, 소규모: 마을 단위)을 **읍·면 단위**(중규모: 150~1,000세대, 예타추진)까지 **확대**할 계획

  ※ ❶ LPG공급시설(저장탱크), ❷ LPG배관망(공급관), ❸ 세대내 배관 및 사용시설 등 全 주기 가스공급체계 구축

- 또한, **LPG 혼소, LNG-LPG 겸용 발전, 수소제조** 등 에너지 수급관리 활용※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동절기, 가격 급등 등 LNG 수급 위기 발생 시 대체 연료로서 LPG 활용 추진

○ ❷ **[LPG 유통·가격 안정화]** 다단계 고비용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LPG 충전·판매업**의 **유통구조 합리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

  ※ 충전·판매업의 대형·집단화, 공동배송센터 등 LPG 물류 합리화 지원

- 소비자 보호를 위한 LPG 품질·정량검사 지속 추진, **LPG 가격·수급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서민 연료**인 **LPG**에 대한 **가격 안정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LPG 시장 점검회의, 점검단 및 신고센터(가격·담합; 석유공사, 유통·품질; 석유관리원) 운영

○ ❸ **[신수요 기반 창출 지원]**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중간 **가교(bridge)역할**을 할 수 있도록 **LPG 충전소 인프라**를 **활용**한 **융·복합**※ **수소충전소 전환**, **연료전지** 등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거점 확산**을 **지원**할 계획

  ※ 모델 예시: LPG충전소 + 수소·전기 충전소 + LPG 연료발전(전력 및 열 생산·판매)

- 친환경 LPG 선박 벙커링 사업 기반 마련, 전력피크 분산용 LPG GHP 보급 등을 추진할 계획

○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LPG 업계, 유관기관 등과 향후에도 함께 긴밀히 소통하면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LPG**가 **중요**한 **중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지원**을 해 나갈 계획

- **LPG**는 **가스체 에너지원**으로서, 기존 화석연료 대비 LPG의 **친환경성**과 **분산형**(저장·수송 용이) **장점**이 있어, 이번 LPG 이용·보급 시책 추진을 통해서 지리적·경제성 여건 등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하는 **농어촌 소외지역**의 **에너지사용환경**이 **개선**되고,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도 **LNG**와 더불어 **중간 가교 에너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국가 기후위기 적응연구 업무협약 체결

자료 : 환경부(2022.9.6.)

○ [국립환경과학원, 국가 기후위기 적응연구 업무협약 체결※, 2022.9.6.]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과학기반※※을 강화하고 국가의 기후위기 적응역량 향상을 위한 협력 확대를 위해 기상, 농업, 산림, 해양수산, 물관리 등 부문별 전문기관과 2022년 9월 6일, 서면으로 업무협약을 체결

※ 기상(국립기상과학원), 농업(국립농업과학원), 산림(국립산림과학원), 수산(국립수산과학원), 해양(국립해양조사원), 생태(국립생태원), 보건(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물관리(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분야별 총 10개의 대표 기관이 참여

※※ 탄소중립기본법 제3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 (협약사항) △기후위기 적응연구 협의체의 운영, △적응정보 관련 연구정보 등 공유, △기후위기의 복합적인 영향성 규명을 위한 공동연구사업, △세미나, 학술회, 연찬회 등 행사 개최, △적응 관련 신규 쟁점 및 상호 협력분야 발굴 등

- (기대 효과) '기후위기 적응정보 종합플랫폼(이하 적응정보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력의 장을 구체화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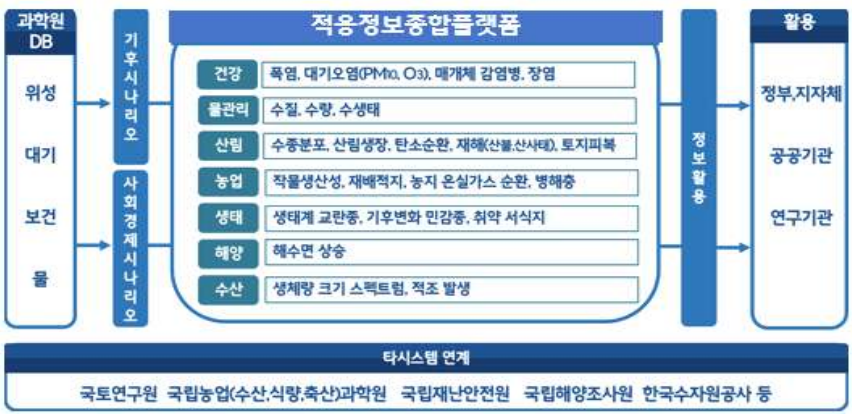
〈기후위기 적응정보 종합플랫폼 구축계획(안)〉

◈ (배경) 기후위기 적응정보는 일관된 기준 없이 부문별로 제공 중이며, 연구 및 적응대책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이 부재

◈ (국외 사례) 유럽연합(EU)의 경우 기후적응플랫폼(Climate ADAP), 영국은 기후회복프로그램(UKCRP), 독일은 기후준비포털(KLiVO), 일본은 기후변화/태평양 적응정보플랫폼(A-PLAT/AP-PLAT) 등 적응정보 종합플랫폼을 통해 기후위기 관련 연구와 전문지식을 수집·제공하고 적응 관련 연구 및 정책에 활용하도록 지원

◈ (종합플랫폼) 적응정보의 기준을 마련하고 과학원 및 유관기관의 DB 연계를 통해 신뢰도 높은 적응정보 종합플랫폼 구축

▌기후위기적응정보 종합플랫폼의 구성(안) ▌



제11호 태풍「힌남노」피해 지원 주요 동향

자료 :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2022.9.7.)

○ [정부, 태풍 「힌남노」 피해의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예비비 500억 원 지출의결, 2022.9.7.] 정부는 2022년 9월 5~6일 양 일간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경북 경주·포항지역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2022년 9월 7일, 국무회의에서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지원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 원 지출(안)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의결

※ 금번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재원을 개략적으로 산정하여 긴급히 지원할 수 있는 개산예비비※※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개산예비비는 2012년 태풍 「산바」 피해복구를 위해 지급된 이래 10년 만에 처음 지출하는 것임.

※※ (개산예비비) 국가재정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신속한 복구를 위해 복구계획 확정 전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략적으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제도

- (주요 내용)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가 큰 지자체의 이재민 구호 및 사유시설 복구비 지원소요 등에 대응하여 신속히 교부·지원할 계획

○ [행정안전부,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 응급복구비 긴급 지원, 2022.9.7.]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 9월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80억 원※을 긴급 지원, 경북 포항·경주 등 태풍이 통과하거나 근접해서 지나간 직접 영향 지역의 피해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지자체의 재난 수습 비용을 보조

※ 지역별 인명·시설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북 40억 원, 부산·울산 각 10억 원, 대구·전남·경남·제주에 각 5억 원을 지원

○ [행정안전부, 경북 포항·경주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이후 추가 선포 예정, 2022.9.7.]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9월 7일, 경북 포항시, 경주시 등 2곳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지자체 자체조사(2022.9.9.~15.) 및 중앙합동조사(9.16.~22.)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대통령께 추가 선포를 건의할 예정

- (주요 내용)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 경감,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혜택※ 이 추가적으로 지원

※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됨.

◈ 농업 · 농촌 동향

농촌공간정비사업 본격 확대 추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9.7.)

○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본격 확대 추진, 2022.9.7.] 농식품부는 유해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2년도 1~2차※※ 신규 대상 지구를 발표하면서 쾌적한 농촌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본격적으로 지원,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2022년 327억 원 → 2023년 정부안 776억 원)와 더불어 동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2.8.31. 발의)을 추진

※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 주거지 인근의 유해시설을 철거·이전하도록 지원하고, 유해시설을 정비한 부지를 생활서비스 시설, 주거단지, 마을공동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1차 공모 선정 결과) 충북 제천, 영동, 괴산, 음성 / 충남 부여, 청양 / 전북 김제 / 전남 화순, 장흥 / 경북 상주(함창읍), 상주(중동면), 고령 / 경남 김해, 고성, 산청, 합천
(2차 공모 선정 결과) 충남 서천(화성지구) / 전북 남원, 장수 / 전남 해남 / 경북 포항, 경주 / 경남 진주(명석면), 진주(수곡면), 의령(대의면), 함안, 창녕

- **(주요 내용)** △2021년 시범지구 5개소(괴산, 상주, 영동, 영월, 김해)를 거쳐 2022년부터는 사업 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매년 40개소씩 2031년까지 총 400개소**를 **정비**를 **목표**로 하며, △현재까지 확정된 사업 지구(32개소) 분석 결과 평균 사업비는 155억 원 규모이고, **정비 대상**은 **축사**(27개소)가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빈집(10개소)·공장(7개소)·폐창고(4개소) 등이 포함, △정비된 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으로는 **귀농 귀촌인·청년** 등을 위한 **주택단지 조성사업**과 **보육·교육·문화·체육** 등 **생활 서비스 시설 조성사업**, **주민 쉼터** 등

2023년 농업 · 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 공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9.5.)

○ [농식품부, 농촌 시군 대상 2023년 농업·농촌 알이백(RE100) 실증지원사업 공모, 2022.9.5.] 농식품부는 **2022년 9월 5일~10월 14일까지** 농촌 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2023년 『농업·농촌 알이백(RE100)※ 실증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

※ 'RE100':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

정책동향

- (주요 내용) △사업에 참여하는 농촌 마을은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는 에너지 효율 리모델링 등을 2년간 모두 지원, △2023년에는 농촌 지역 4개 시·군을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지자체 4개소는 2년간 국비 1,786백만 원을(국비 50~100%) 지원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농촌 마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태양광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 생산 등을 통해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고, 건물의 열 손실을 줄이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을 통해 에너지 낭비를 줄여 농촌 마을을 탄소중립 마을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사업

◈ (사업대상) 농촌 지역 4개 지방자치단체(시·군)※

※ 지방자치단체당 1개 마을이며, 1개 마을에 패키지사업 형태로 모두 지원

※ 2년 차 사업으로 매년 4개소 실증사업 추진하여 2025년까지 12개소 추진

◈ (사업내용) 에너지 진단 컨설팅을 통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마을발전소, 가공·유통시설 등), 공동이용시설 에너지 효율 향상 리모델링 등 지원

– (컨설팅) 에너지 사용량 진단 및 여건에 맞는 발전시설 종류·용량 도출, 전문업체를 통해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시행※

※ 지자체 4개소 × 50백만 원 × 국비 100% x 1년 차 100% = 200백만 원

– (마을발전소)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국·공유지, 마을 유휴부지에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 운영·관리, 발전수익금은 지자체·마을 협의를 통해 발전시설 관리 및 마을 공동기금,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 지자체 4개소 × 976백만 원 × 국비 50% × 1년 차 20% = 390백만 원

※ 지자체 4개소 × 976백만 원 × 국비 50% × 2년 차 80% = 1,562백만 원

– (가공·유통시설 등) 농업 생산·가공·유통시설 및 주택의 건물 지붕·유휴부지 등에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는 해당 시설에서 자가소비※

※ 지자체 4개소 × 450백만 원 × 국비 50% x 1년 차 100% = 900백만 원

– (리모델링) 마을회관·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을 단열 및 재생에너지 기술을 적용한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로 리모델링, 개축 등 지원※

※ 지자체 4개소 × 310백만 원 × 국비 50% × 1년 차, 2년 차 50% = 310백만 원

– (친환경·저탄소 농업) 농가의 탄소 저감 관행을 장려하고, 환경친화적인 생산, 유통, 소비 구조를 정착시켜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기여할 계획임을 강조

태풍「힌남노」피해 상황 점검 및 후속 조치 대책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9.6.)

○ [농식품부, 태풍 「힌남노」 피해 상황 점검 및 후속 조치 대책 회의 개최, 2022.9.6.]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2022년 9월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신속한 응급복구 추진"을 지시

※ 피해 현황(2022.9.6. 14시 기준):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인해 경북, 경남, 전북, 제주를 중심으로 벼, 사과, 배 등 전국 3,815.2ha의 농작물 피해(침수 2,607.5ha, 도복 538ha, 낙과 669ha)가 발생, 비닐하우스 0.4ha가 파손, 향후 확인이 진행됨에 따라 피해 면적은 변동

▪ 최근 태풍·호우 농작물 피해: (2019) 80,206ha → (2020) 158,105 → (2021) 45,077 / 평균 94,463ha
▪ 과거 유사 태풍 피해
– (2003년, 매미) 농작물 12만 ha, 농경지 유실·매몰 5천 ha, 가축 84만 마리, 비닐하우스 1,705ha
– (2002년, 루사) 농작물 24만 ha, 농경지 유실·매몰 15천 ha, 가축 241만 마리, 비닐하우스 1,205ha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 정책」 추진계획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9.7.)

○ [농식품부,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 정책」 추진계획, 2022.9.7.]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마련

※ ❶ 동물병원별 진료비 편차 발생, ❷ 진료비 사전 안내 부족, ❸ 진료비 과다청구 우려 등 개선

- ❶ (진료비 조사·공개)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지역별 공개(농식품부 누리집 등)하여 진료 선택권 강화

- ❷ (진료항목 표준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의 표준인 진료항목 표준을 개발·보급※하여 진료비 편차 완화

※ (당초) 2024년까지 40개 개발 → (조기 달성) 2024년까지 다빈도 항목 100개 개발, 게시

- ❸ (진료비 사전 게시) 기본적인 중요 진료비부터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동물병원 게시(2023.1.)

- ❹ (중대진료 사전설명)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비용을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의무화(2023.1. 시행)하여 진료비 과다청구 우려 방지

- ❺ (부가가치세 면세)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조사 결과 마련 등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을 확대·추진

- ❻ (표준수가제)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쟁점·도입 가능성 검토(2022~2023)

- ❼ (진료부 제공) 동물의료사고·분쟁 관련 동물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진료부를 제공하도록 의무 부여(개정안 국회 계류 중)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 사업설명회 개최

자료 : 산림청(2022.9.6.)

❍ [산림청,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 사업설명회 개최, 2022.9.6.]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대응과 과학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국정과제인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림사업법인**, **국유림관리소**를 대상으로 산림경영과 산림자원조사 활동에서 생산되는 **빅데이터 수집관리체계 사업설명회**를 **2022년 8월 31일 경북권(안동)**을 시작으로 **2022년 9월 19일까지 9개 권역별**※로 **개최**

※ 경북(안동), 경남(진주), 전남(순천), 전북(진안), 충남(대전), 충북(청주), 강원(원주), 경기·수도권(서울), 제주

- **(주요 내용)** 국·공·사유림에서 추진하는 **산림경영**(13종)※과 **자원조사**(27종)※※ 활동에서 생산되는 모든 용역성과물을 기존의 도서나 CD형태가 아닌 공유·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로 납품받는 **「산림경영·자원 빅데이터 수집·관리체계(2022~2024년)」 구축 계획**과 이를 통해서 **탄소중립 달성 목표**와 **빅데이터 기반**의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이라는 국정과제 추진계획 등을 설명

※ 산림경영: 경영계획, 조림, 숲 가꾸기, 벌채, 임도, 사방, 병해충, 도시숲 조성 등 13종

※※ 산림자원조사: 산지전용, 훼손지 실태조사, 산불피해조사, 산사태 피해조사 등 27종

▌(70. 국정과제)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 개념도▐



◈ 축산 동향

낙농제도 개편 방향에 합의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2.9.5.)

○ [농식품부, 낙농제도 개편 방향에 합의, 2022.9.5.] 농식품부는 2022년 9월 2일,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생산자, 수요자, 소비자 등 각 계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논의한 결과, ❶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❷ 원유가격 결정방식 개선, ❸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 등 정부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

※ ❶ 도입 초기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195만 톤은 음용유 가격을, 추가 생산되는 10만 톤은 가공유 가격을 적용, ❷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생산비에만 연동해 가격을 결정하는 현행 생산비 연동제는 생산비 외에 수급 상황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결정 구조를 개편, ❸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관을 개선※※,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소비자·학계 등 중립적인 인사의 참여 확대(현행 15명 → 23명)를 검토, 총회가 낙농진흥회의 최고 의결기구임을 고려해 낙농진흥회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로 회원을 조정하고, 만장일치제도 함께 개선

※※ (종전) 재적이사 2/3 개의, 출석이사 과반수 의결 → (개선) 재적이사 과반수 개의 및 의결

- (생산자 측)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는 방향에 동의하나 사료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가 급격히 상승※하여 경영 상태가 악화된 농가가 크게 증가해 원유가격 인상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원유가격 협상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유업체 측에 강하게 요청

※ 젖소용 배합사료 가격: (2021) 447원/kg → (2022.8.) 621(174원↑, 38.9%↑)

- (유업체들)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에 동의하나, 음용유 195만 톤은 실제 수요보다 높은 수준으로 원유 구매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

- (향후 계획) 앞으로 정부는 간담회 논의 결과를 기초로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결 후 낙농진흥회 내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원유가격 협상도 소위원회를 통해 진행해 나갈 계획

아젠다발굴 OECD 러-우 전쟁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함의 외

이슈 브리프 OECD 러-우 전쟁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함의

※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OECD 러-우 전쟁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 함의, 2022.8.22.)(출처: Agricultural markets: Impact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Russian aggression against Ukraine, 2022.7.6. 발간)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시장에서 위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국제 곡물과 유지종자의 중요 생산·수출국※ 이며, 러시아는 세계 에너지 및 비료 등 투입재 시장에서 중요※※한 국가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각각 지난 5년간 평균 세계 밀 생산량의 10%와 3%, 세계 밀 수출의 20%와 10%를 차지하며, 세계 시장에 밀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

※※ 러시아는 세계 1위의 천연가스 수출국이며, 2020년 전 세계 비료 수출의 15% 이상을 차지

○ [우크라이나의 영향]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해 적기 수확 여부가 불투명해지며, 항구 폐쇄와 유지종자 분쇄 작업 난항으로 인해 관련 품목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

※ FAO 및 USDA에 따르면, 생산은 2021년에 비해 30% 이상 감소했으며, 2022년 6월 기준 우크라이나 농업의 직접 손실은 43억 달러, 간접 손실은 233억 달러로 추산

○ [러시아의 영향]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 중 식량 생산에 관한 사항은 면제되고 있어 농업 생산은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수출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

-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는 농업 관련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많은 국제 기업의 참여를 감소시키며, 이는 간접적으로 농약, 종자, 수의학 의약품 및 농업 기술(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 등 농업 연관 산업을 제한 가능

○ [식량안보 영향]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수출 감소, 에너지 및 비료 가격 상승은 국제 식품 가격을 상승※시켜 세계 식량안보를 위협

※ (시나리오 분석) 우크라이나의 수출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고, 러시아 밀 수출이 50% 감소 시 국제 밀 가격 34% 상승

○ [정책 권고]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수출을 정상화하기 위해 물류 재건 지원 집중, △농산물 및 투입재 무역을 개방적으로 유지하여 식량 접근성을 높이며, △식량안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정보 제공 강화 등 시장 투명성 제고 필요

아젠다 발굴

-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산물 공급 증대** 및 **식생활 개선** 등 **수요**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고려**할 필요

〈국제 농산물 및 투입재 시장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중요성〉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국제 곡물**과 **유지종자**의 가장 **중요**한 **생산·수출국**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각각 지난 5년간 평균 **세계 밀 생산량**의 **10%**와 **3%**, **세계 밀 수출**의 **20%**와 **10%**를 **차지**하는 등 양국은 세계 시장에 밀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의 **5% 수준**을 차지, 특히 **우크라이나**는 **세계 3위**의 **옥수수 수출국**으로 생산량의 대부분을 수출,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보리**(사료용)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며 각각 **3위, 4위 수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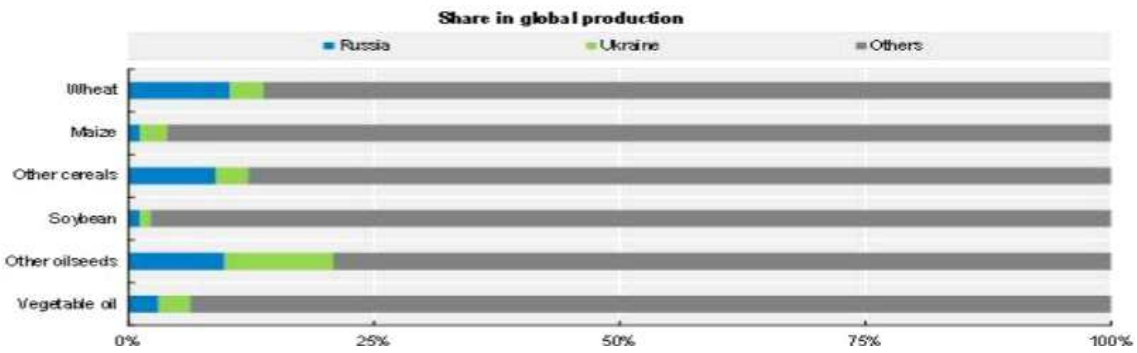
-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 해바라기 씨 생산국**이며, 양국은 세계 해바라기씨유 수출의 각각 50%와 25%를 차지하고, 미주지역 제외 시 **가장 큰 대두 수출국**이며, **가장 큰 non-GMO 대두 수출국**

○ **러시아**는 **세계 에너지 및 비료** 등 **투입재 시장**에서 **중요**한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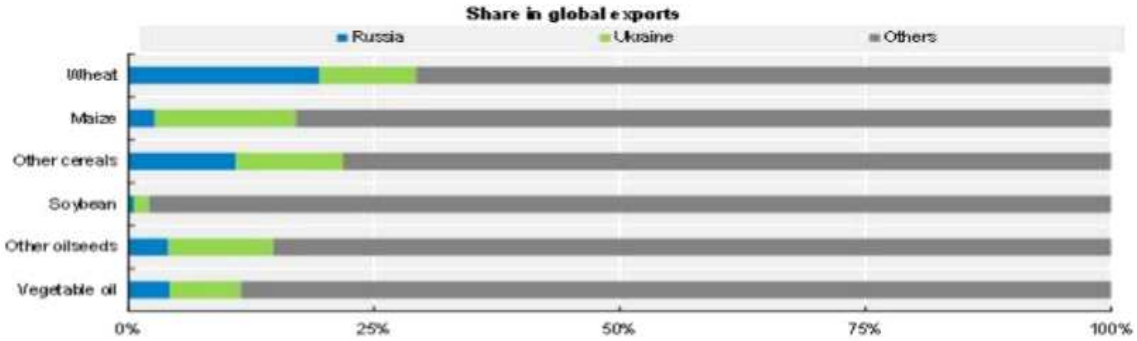
- 러시아는 **세계 1위**의 **천연가스 수출국**(세계 수출의 20%, 2019 기준), **2위**의 **석유 수출국**(11%), **3위**의 **석탄 수출국**(15%)

- 또한, 러시아는 **세계 1위**의 **질소(N) 비료**, **2위**의 **칼륨(K) 비료**, **3위**의 **인(P) 비료**의 **수출국**으로 **2020년 국제 비료 수출**의 **15% 이상**을 차지

▌주요 작물의 글로벌 시장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점유율▐



아젠다 발굴



〈우크라이나 농산물 생산 및 수출 영향〉

○ 러-우 전쟁은 주로 **우크라이나**의 **생산 및 수출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

- 전쟁으로 인해 **적기 수확 여부**가 **불투명**해지며, **항구 폐쇄**와 **유지종자 분쇄 작업 난항**으로 인해 관련 품목 수출에 악영향

○ 현재 우크라이나 생산자들은 전쟁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 **높은 회복력**을 보이고 있으며, 가능한 계속해서 농작물과 축산물을 생산 중

- 2022년 5월 현재 **2022-23년도 겨울 작물**의 생산 전망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인력난**으로 인해 **2022년 6월 수확 전 시비 및 관리 작업**에 대한 **불확실성 상존**

- 2022년 봄 작물의 파종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나, **주요 봄작물**(해바라기씨, 옥수수, 봄보리)의 **파종면적**은 작년보다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

- FAO 및 USDA에 따르면, **생산**은 2021년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지만 여전히 **국내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우크라이나의 **해충 및 동물 질병**,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통제 역량**에 **영향**을 미치고, 우크라이나와 주변 국가에서 **질병 확산**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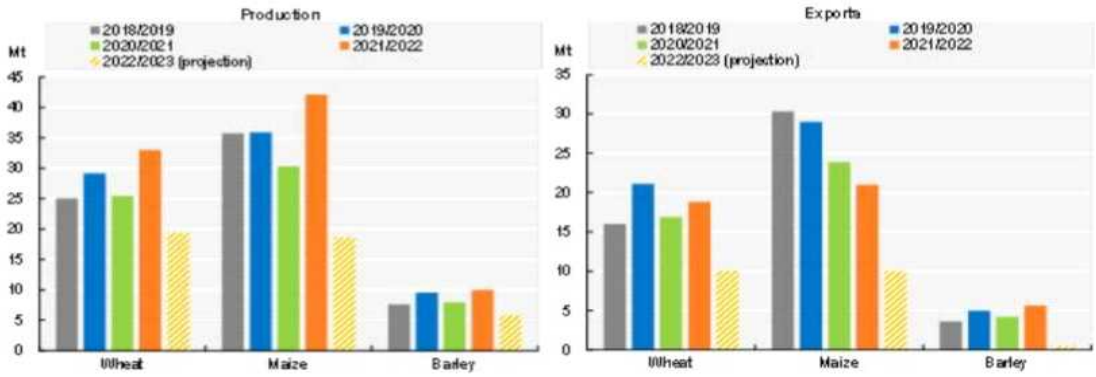
○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출**의 **90% 이상**은 흑해 등 **해상 항구**※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러시아**의 **점령**으로 인해 **접근 난이**하고, **일부 저장 및 가공 시설**이 **손상**되어 **농산물 수출**이 **더욱 지연**되고 **제한 중**

※ 도로, 철도 및 하천 항구 등 기타 채널은 해상 항구에 비해 처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이에 현재 수출은 정상 대비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

○ 2022년 6월 기준 생산량 감소, 생산비 상승, 물류 차질, 수출 품목 가격하락 등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농업**의 **간접 손실**은 **233억 달러**로 추산

아젠다 발굴

▌우크라이나 주요 곡물의 생산 및 수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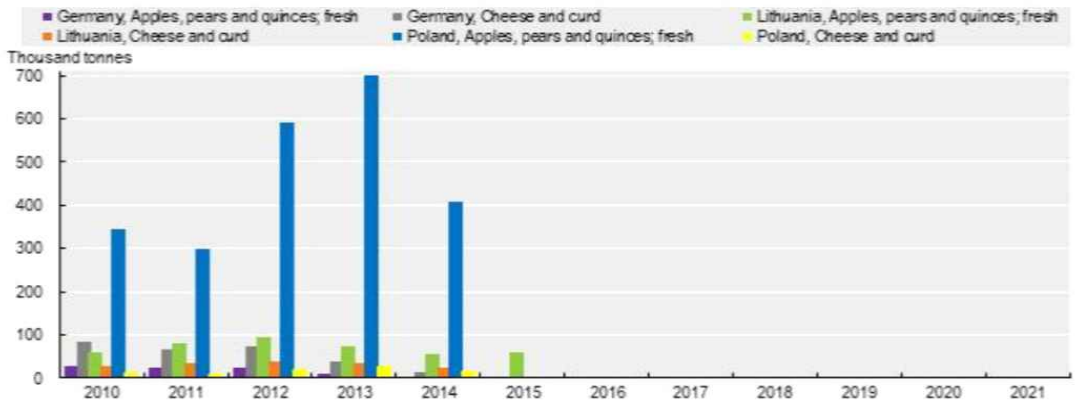


〈러시아 농산물 무역의 영향〉

○ 현재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 중 **식량 생산**에 관한 **사항**은 **면제**되고 있어 러시아의 농업 생산은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

-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시** EU, 북미, 기타 국가들은 **러시아산** 육류, 유제품, 과일 및 채소에 대해 **수입 금지 중**이며, 러시아는 이에 대응하여 밀의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속 증가

▌독일, 리투아니아, 폴란드의 러시아 농산물 수입 현황(2010-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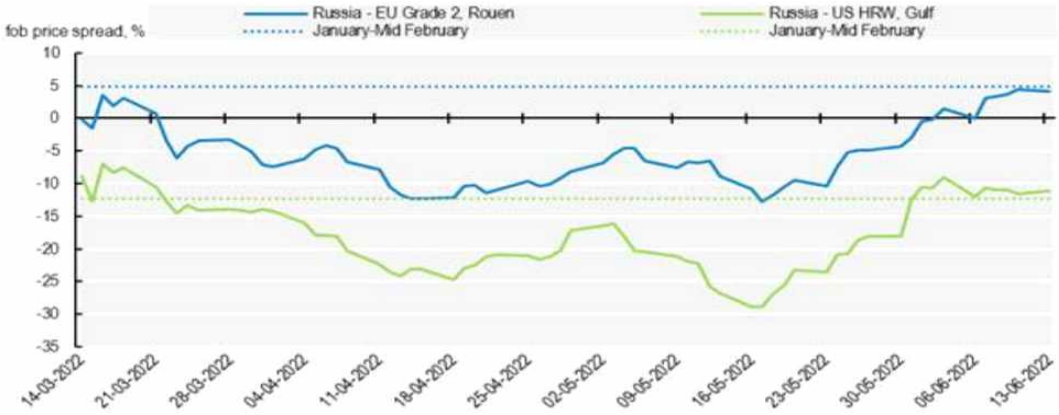
○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는 지금까지 농업 및 비료 무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지만 농업 관련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많은 국제 기업**이 러시아에 대한 **참여 감소**

- 재정 제재 등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러시아 밀**은 **다른 원산지**에 비해 **가격**이 **하락**※

※ 러시아와 미국 밀, 러시아와 EU 밀의 수출 가격 격차는 2022년 5월 중순에 각각 -30%와 -12%로 정점

아젠다 발굴

▌러시아 밀과 타원산지 밀의 국제 가격 격차▐



- **농산물 수출 시장**에서 **손실**은 **러시아 생산자**의 **소득**을 **저하**시켜 **미래**의 **농업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존재

- 또한, 농약, 종자, 수의학 의약품 및 농업 기술(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 등 **농업 관련 산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러시아 농업**의 **미래 생산 잠재력**에 **부정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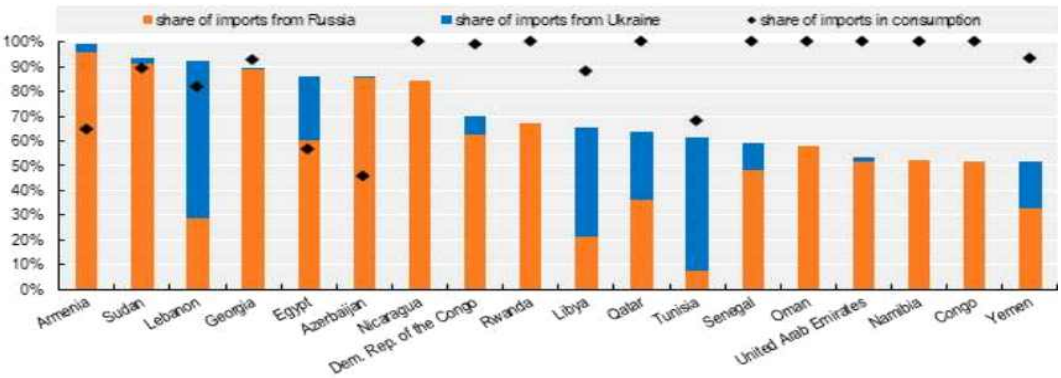
〈국제 식량안보〉

❍ **우크라이나인들**은 국내에서 **식량안보 문제**에 **직면**

- 2022년 5월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에서 800만 명의 국내 실향민이 발생, 630만 명이 우크라이나를 탈출했으며, 190만 명이 우크라이나로 귀국, 특히 국내 실향민은 **식량 및 기타 필수품**, **공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국내 공급 채널 유지**가 **어려워**, 다양한 지원 사업들은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중점

❍ **저소득 식량 부족 국가군(LIFDC)**에 속하는 다수의 식량 수입국은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식량 공급**에 **의존**하고 있어 동 지역의 분쟁은 세계 식량안보를 위협

▌주요국의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밀 의존도(2018-2020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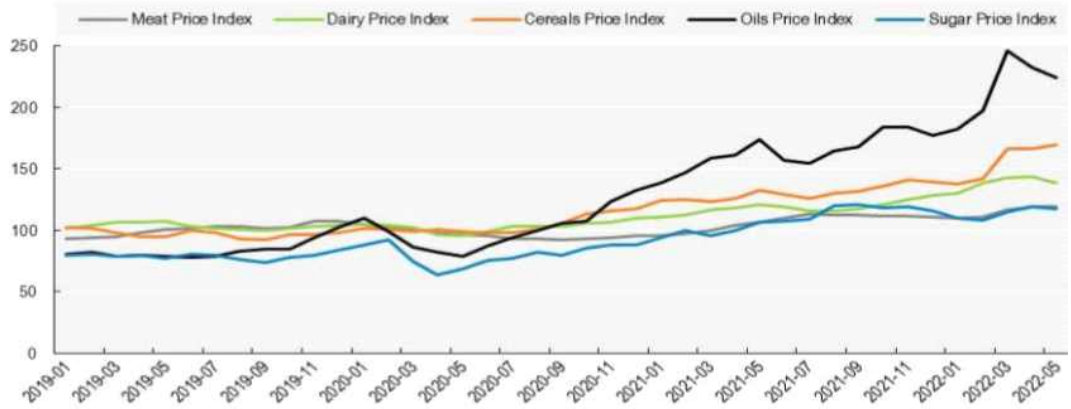
아젠다 발굴

○ 2022년 6월 현재, 밀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품목은 전 세계적으로 충분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불확실성**에 따른 **가격상승**은 **지속**

- **무역 흐름**의 **조정**과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국제 농산물 가격**이 **상승 중**이며, **2022년 3월 FAO 식품 가격 지수**(FFPI)는 **159.7포인트**로 **1990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 FFPI는 2022년 4월과 5월에 약간 하락했지만, 전년도 동월보다 여전히 30% 높음.

- 소득의 많은 부분을 식품에 지출하는 **LIFDC**의 **취약계층**은 특히 이러한 **가격 인상 위험**에 **노출**

▌FAO 식품가격지수 동향▐



○ Aglink-Cosimo 모델을 사용하여 2022-2023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 및 수출 수준에 따른 영향을 분석, **시나리오별 국제 밀 가격 변화**를 **전망**

- 러시아의 수출 변동 상황 없이, 우크라이나의 잉여 농산물의 수출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면 **세계 밀 가격**이 **19% 상승**

- **러시아 수출**도 평소보다 **50% 낮고**, **우크라이나**의 **수출 여력**이 **없을 경우 밀 가격**은 **34% 상승**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의 밀 공급 시나리오에 따른 국제 밀 가격 상대 변화▐

		Restriction of wheat exports by Russia			
		0%	-10%	-25%	-50%
Reduction of Ukraine exports	0%	0	2%	5%	11%
	-25%	4%	6%	10%	16%
	-50%	9%	11%	15%	21%
	-100%	19%	22%	26%	34%

아젠다 발굴

○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 세계적으로 영양실조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밀** 등 **농산물 가격**의 **추가 상승**은 **세계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영양 결핍 인구**의 **추가 증가**로 이어질 우려 존재

〈정책 권고〉

▌국제 무역 측면: 단기

○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데 중점, 우크라이나 내 **기반 시설**도 **전쟁 피해**로부터 **유지 보수**되어야 하며, 이는 **전후**에도 **지속**되어야 할 장기적인 과제

- 농산물의 주요 교역 채널인 **흑해 항구**(Odessa, Mykolaiv, Mariupol 및 Kherson)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러시아와의 외교적 협상 등)

- △우크라이나 육로 국경에서 행정 절차 간소화, △도로 및 철도 연결망 개선, △루마니아, 폴란드 등 다른 국가의 철도 및 도로를 활용한 운송 활성화 등 **대체 경로 개발** 필요

○ 일부 국가들의 **농산물 수출 제한**을 **신속히 해제**, **수입장벽 낮추고**, **무역 절차**의 **단순화** 등 **농산물 및 투입재 무역**을 **개방적**으로 유지

- 수출 금지 및 기타 무역 제한이 일시적 국내 가격 인상을 완화할 수 있지만, 국제 시장의 가격 급등을 더욱 가속화하고 국제 무역 시스템에서 해당 국가의 신뢰를 약화

○ 농산물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시장 정보 시스템(AMIS)**과 같은 **시장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

▌공급 측면: 장기

○ **우크라이나 재건 및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착실히 추진할 필요

- 토지, 사회기반 시설 및 장비 피해를 포함하여 **우크라이나 농업 부문**에 대한 **직접 피해**는 **2022년 6월 기준**으로 **미화 43억 달러**로 추산

아젠다 발굴

- OECD를 포함하여 많은 국제기구와 국가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 피해로부터 회복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여러 논의가 이미 진행 중

○ **생산성 향상**을 통한 다른 수출 국가의 곡물 및 유지종자 생산을 지속적 증가하여 **공급망 안정화** 도모

○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및 **기타 동물 질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추가적 식량 불안정 발생 요소**에 **대비**

▌수요 측면: 장기

○ **비식품 농산물 수요**를 **임시적**으로 **조정**하여 **식품**으로 **소비**되는 **농산물**을 **확보**

- 특히, 바이오 연료로 사용되는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정책적 결정에 의해 좌우되므로 빠르게 조정 가능하나, 화석 연료 사용 증가, 식품으로서의 품질 문제 등 고려 사항이 상존

- 농산물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를 낮추고, 농업의 환경적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식량 손실**과 **폐기물**을 **감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현재 식량 손실 및 폐기물 양은 연간 약 12억 6천만 명을 부양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

○ **식생활**의 **개선**※을 통한 농산물 수요 조정 가능

※ 1인당 소비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동물성 식품의 소비를 줄이면 사료 수요 감소 가능

- 식생활의 개선은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지만, 변화의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접근**이 바람직

아젠다 발굴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인도의 식량안보와 EU 간 관계

※ 유럽연합의회조사처의 "India and food (in)security" (2022.7.25.)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인도의 식량안보와 EU 간 관계

○ 2022년 인도의 인구는 약 14억 1,000만 명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며, 2023년에는 중국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인도는 2015년 이후 식량 곡물 생산이 크게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량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음.

- 인도 브랜드 자산 재단(IBEF)에 따르면, 농업은 인도 인구의 약 58%가 생계를 유지하는 주요 원천임.

- 2022년 유엔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인도의 2021년 세계 기아 지수는 116개국 중 101위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6~59개월 미만 영유아의 약 35.5%가 만성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음.

○ 인도는 2030년 중반까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도의 자원 수요가 상품 가격을 주도할 것임.

- 인도는 세계 최대의 쌀 생산국이며, 에너지, 비료 및 해바라기씨유와 같은 농업 투입물의 주요 수입국임.

- 인도의 에너지 소비는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준임.

- 인도는 우크라이나산 해바라기씨유의 세계 최대 수입국이며, 수입이 국내 시장 공급의 86%를 차지함.

○ 인도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국가 중 하나이며, 2021년 세계 기후 위험 지수에서 7위를 차지함.

- 석탄 사용에 대한 '단계적 폐지' 보다는 '단계적 축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홍수, 기온 상승, 폭염 및 강우량 감소는 농업 부문의 취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가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아젠다 발굴

○ 인도와 EU는 2004년부터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해왔으나 2014년 이후 EU의 양자간 개발 협력 대상은 아님.

- 그러나 2021년 채택된 EU의 근린국가 지원, 개발원조, 국제협력(NDICI-GE)에 따라 일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2020년 7월에 개최된 제15차 EU-인도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와 녹색에너지에 관한 협력을 다루는 '**EU-인도 전략적 파트너십: 2025년 로드맵**'을 승인함.

○ 2021년 5월에는 녹색성장(민간 항공의 탈탄소화 포함), 무역과 기술을 통한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을 포함한 식품, 영양 및 농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 2022년 6월에는 공식적으로 균형 있고 포괄적이며, 상호 이익이 되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2013년 이후 동결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함.

- EU와 인도는 2007년 포괄적무역투자협정(BTIA) 협상을 시작하였으나 2013년에 결렬되었음.

○ EU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인도의 교역국이며, 인도는 EU의 10번째 교역국임.

- 2021년 기준 EU는 인도 무역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도는 EU 무역의 2.1%를 차지함.

○ 2022년 4월 델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인도 총리는 EU-인도 간 무역 및 기술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함.

■ 자료 출처:
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home

아젠다 발굴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 일본 농림수산성 “環境負荷低減に資する「みどりの食料システム戦略」の実現に向けた政策の推進”(2022.8.31.)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2년 8월 31일,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본부 제9회 회의에서 환경부담 저감에 이바지하는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이하 미도리 전략)’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사항을 논의하였음.

○ 미도리 전략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식량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지역의 대응을 지원하는 교부금 등을 활용하는 동시에 자원·에너지 조달부터 생산, 유통, 소비까지 각 단계별 대응과 혁신을 추진함.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 정책 추진 사항〉

〈미도리 전략 실현 기술 개발·실증 사업(80억 엔)〉

◈ 화학 농약·화학 비료 사용량 저감과 높은 생산성을 양립하는 신품종·기술 개발 추진
- 스마트 농업 기술 및 펠릿 퇴비 활용 기술 실증 등 추진

〈미도리 전략 추진 종합 대책(30억 엔)〉

◈ 환경부하 저감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모델 지구 창출(교부금)
- 토양진단 및 추비 등 국내 자원 활용을 통한 화학비료 저감, 병충해 종합 방제, 재배력 재검토 등 재배기술과 첨단 기술 등을 도입한 친환경 재배체계로 전환, 소비자 이해 양성을 위한 대응 추진
- 유기농업 단지화 및 학교 급식 이용, 판로 확대
- 바이오매스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 지역에서 소비) 대책
- 환경부담 저감과 수익성 향상을 양립한 시설원예 산지 육성

◈ 친환경 재배체계 보급, 유기농업 추진(민간단체 등)
- 기술 확립 보급, 생분해성 멀칭 도입 촉진, 유기농업 기술 지도 강화

〈농축산업 지속가능성 확보〉

◈ 환경보전형 농업직접지불교부금(28억 엔) 지원

◈ 강한 농업 만들기 종합 지원 교부금(164억 엔), 농지 이용 효율화 등 지원교부금(25억 포함)
- 화학 농약 및 화학비료 저감, 탄소중립 등 추진에 필요한 기계, 시설 정비

◈ 농업 지원 서비스사업 육성 대책(3억 엔 내수)

◈ 환경부담경감형 지속적 생산지원사업(71억 엔), 축산 생산력·생산 체계 강화대책사업(15억 엔 포함)
- 낙농가 및 육용우 농가가 이행하는 온실가스 감소 등의 대응, 논을 활용한 자급사료 생산 확대 등 대응 지원

◈ 축산 고품질 퇴비 생산 유통 촉진 지원사업(1억 엔)
- 고품질퇴비 생산 및 광역 유통 등 추진을 위한 이해 양성 및 생산기술 보급 등

아젠다 발굴

〈혁신적인 기술 · 생산 체계 연구개발 추진〉

◈ 지식 축적과 활용의 장에 의한 이노베이션 창출(53억 엔)
- 다양한 분야의 지식 · 기술 등을 축적하여 산학관 연계 연구 지원

◈ 문샷형 농림수산 연구개발사업(22억 엔)
- 지속적인 식량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시행

◈ 미도리 전략 기반 농업기술의 아시아 몬순 지역 응용 촉진 사업(1억 엔)
- 일본의 유망 기술을 아시아 몬순 지역에서 응용하기 위한 공동연구 실시

〈식품산업 지속가능성 확보〉

◈ 지속 가능한 식품산업으로 전환 촉진 사업(3억 엔)

◈ 신사업 창출 · 식품 산업 과제 해결 조사 · 실증 등 사업(2억 엔)
- 지속 가능한 식품 사업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조사, 실증 실시

◈ 식품 등 유통 지속화 모델 종합 대응 사업(3억 엔)
- 디지털화 · 데이터 연계를 통한 공급망 · 모델 구축 지원 등

◈ 식품 손실 감소 · 플라스틱 자원 순환 추진(2억 엔)

〈관계자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환경 조성〉

◈ 식품 공급망 환경 배려 가시화 추진 사업(6억 엔 포함)

◈ 닛폰푸드시프트종합추진사업(2억 엔)
- 국민의 이해 양성을 위한 정보 안내

◈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추진(1억 엔 포함, 36억 엔 포함)

◈ 자연계 신용 창출 추진 사업(6억 엔 포함)
- 자연 유래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 형성 추진

〈임업 · 수산업 지속가능성 확보〉

◈ 산림 · 임업 · 목재 산업 그린 성장 종합 대응 등(155억 엔, 32억 엔 포함)
- 엘리트 트리 등 묘목 안정 공급 등 추진
- 간벌 · 재조림 추진 및 목재 가공 유통시설 정비
- 국민 참여 산림 조성 및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국민운동 추진

◈ 어업구조개혁 종합대책 사업(100억 엔), 양식업 성장산업화 추진 사업(4억 엔)
- 흉어 · 탈탄소에 대응한 다목적 어선 등 도입 실증 지원
- 양식용 먹이, 종묘 등 어장에 관한 기술 개발 · 조사 지원

◈ 어업 노동 안전 확보 · 혁신적 기술 도입 지원사업(1억 엔)

〈지속 가능한 농산어촌 정비〉

◈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업 수리시설 에너지 절약 등 추진

◈ 산림 흡수량 확보 · 강화 및 국도 강화에 이바지하는 산림 정비 · 치산 대응 추진

◈ 거점항구의 에너지 절약 대책 및 해초 서식지 · 갯벌 보전 · 창조

■ 자료 출처:
https://www.maff.go.jp/j/kanbo/kankyo/seisaku/midori/honbu.html
https://www.maff.go.jp/j/kanbo/kankyo/seisaku/midori/attach/pdf/honbu-51.pdf

아젠다 발굴

언론 동향 농촌진흥청 개청 60주년 기념 주요 동향

※ 아젠다 발굴을 위해 주요 일간지와 농업전문지에 기고된 내용을 근거로 농업·농촌 관련 쟁점 및 이슈, 주요 농정현안에 대응하고자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 개청 60주년 주요 동향

○ 농촌진흥청이 **올해 60주년**을 맞아 **2022년 9월 1일부터 3일까지 기념식**과 함께 **'2022 농업기술박람회'** 를 동시에 **개최**, 최근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혁신적인 농업기술을 농민·국민과 폭넓게 공유

- 기념식에서는 **'과학기술로 만드는 활기찬 농업·농촌, 더 나은 미래'** 를 슬로건으로 한 비전도 선포, 연구개발과 보급체계의 혁신을 통해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실현**,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 구현**,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의 **삶 실현** 등 **4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설정

  ※ (추진전략) ▲창의적 기술혁신과 디지털 생태계 구축으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식량주권 확보 및 환경대응성 강화로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실현, ▲살고 싶고 찾고 싶은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 구현, ▲일사에서 누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의 삶 실현 등

- 올해로 6회째 맞는 농업기술박람회는 농업기술의 과거와 현재·미래를 살펴볼 수 있도록 농업생명관, 스마트농업관, 지속 가능 농업관, 케이(K)-농업기술관, 지역특화 농업관, 청년농업관, 농산업관, 농업과학관 8개 주제관으로 구성

- 이밖에 △청년농민 영농 정착 우수사례 전시, △청년농 아이디어 경진대회, △농업용 로봇 경진대회 등 젊은이들이 농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개청 기념사를 통해 "향후 농촌진흥청은 **지능정보융합 농업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고 **스마트농업 혁명**을 **추진**하는 한편,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안문제 해결**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유지**도 소홀히 하지 않고 **농촌 지역 소멸**에 **대응**해 **농촌**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데 앞장서겠다" 고 천명

- 한편, **새 정부 국정과제**와 **농정**을 뒷받침하고 농민과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식량안보**를 바탕으로 **식량주권·농산물 수급 관리 강화**, △4차산업혁명 기술 기반으로 한 **스마트농업 확산**,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과 **친환경 농업 전환**, △**농업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 확충**, △**농업기술 해외 수출**로 국격 제고 등을 추진

아젠다 발굴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농촌진흥청은 통일벼 개발로 국민의 배고픔을 해결했고, 20세기 녹색혁명과 백색혁명의 주역"이라며 "**농업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한 헌신적 노력으로 **한국농업**이 **발전**하고 성장했다. 21세기 4차산업혁명 시대에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또 한 번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

○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도 영상 축사에서 "우리나라 농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소멸 위기,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식량안보 확립 등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농촌진흥청이 **식량자급률 향상**, **스마트 농업기술 개발**, **청년농업인 육성**, **지역특화농업 활성화** 등 위기 극복을 위해 비장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

○ 특강으로 **민승규 국립한경대학교 석좌교수**(전 농촌진흥청장)는 '한국농업의 미래 상상 RDA(농진청)가 바꾸는 농업의 미래'를 강연, 빅블러(Big Blur) '당신이 알던 모든 경계가 사라진다'를 소개하며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CES)에서 뜻밖에 가장 큰 화제가 됐던 것은 **'식물성고기'**였다며 향후 식품의 생산과 가공, 보관, 운반, 조리 등 모든 분야에 과학기술이 접목된 **푸드테크 시대**를 강조

○ 농촌진흥청,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는 **'글로벌 식량위기 시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공동워크숍**을 개최

-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은 기조 강연을 통해 "한국은 풍족한 식탁과 비만이 더 걱정이지만 인류는 더 많은 식량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업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와 경지면적 감소, 지속가능성과 세대교체의 위기 등은 결국 **식량자급률**의 **위기**로 이어 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

- "따라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식량주권, 자급률, 농민지원, 농지보전, 보조금, 간척지 활용, 쌀 소비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공공비축 확대 방안**과 **해외농업개발, 세계 곡물 유통망 참여, 국제 곡물 시장 불안**에 대응한 **금융·세제 지원**과 **할당물량 확대** 등 정부의 **수급 안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혀

자료: "개청 60주년 농진청, 농촌 현안 해결하고 새로운 100년 연다"(NEWSIS, 2022.9.1.), "농진청 60주년… "스마트농업 혁신 이끌 것"" (한국농어민신문, 2022.9.2.), ""국민행복 100년 새 출발" 농진청, 60주년 기념행사" / "[인터뷰] "4차산업혁명 기술 기반 첨단 스마트농업 확산에 최선"" (농민신문, 2022.9.5.), "농진청 개청 60주년"(농수축산신문, 2022.9.6.)

통계·조사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자료 : 통계청(2022.9.5.)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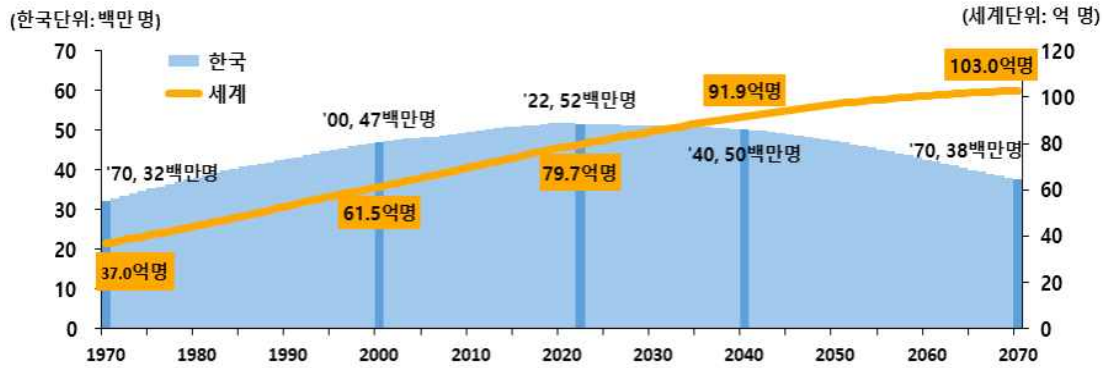
○ [통계청,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발표, 2022.9.5.]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이 자료를 작성

※ 1970~2070년까지 100년간의 시계열자료를 포함, 이 자료에 포함된 인구 규모 등 인구 지표는 각 연도의 7월 1일 시점 기준

❑ 세계와 한국

○ [인구규모] (세계) 2022년 79억 7천만 명으로 1970년 대비 2.2배 수준으로 증가, 2070년에는 103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한국) 2022년 5천 2백만 명에서 2070년에는 3천 8백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세계와 한국의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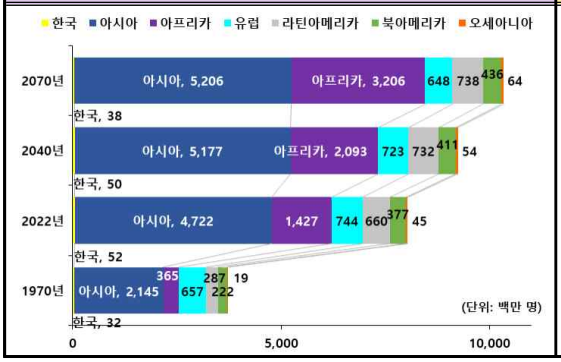


- (대륙별) 2022년 대비 2070년 대륙별 인구는 아프리카(2.2배), 북아메리카(1.2배), 아시아(1.1배), 라틴아메리카(1.1배)는 증가하는 반면, 유럽(0.9배)은 감소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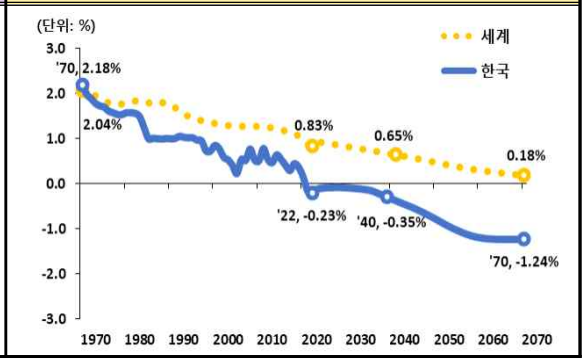
- (인구성장률) 2022년 세계와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각각 0.83%, -0.23% 수준으로 전망, 2040년에는 세계 0.65%, 한국 -0.35%, 2070년에는 세계 0.18%, 한국 -1.24% 수준이 될 전망

- (국가별 인구순위) 2022년에는 중국 인구가 가장 많고, 2070년은 인도 인구가 가장 많아질 전망, 2022년 한국 인구는 29위, 북한 인구는 56위, 남북한 인구는 20위

〈대륙별 인구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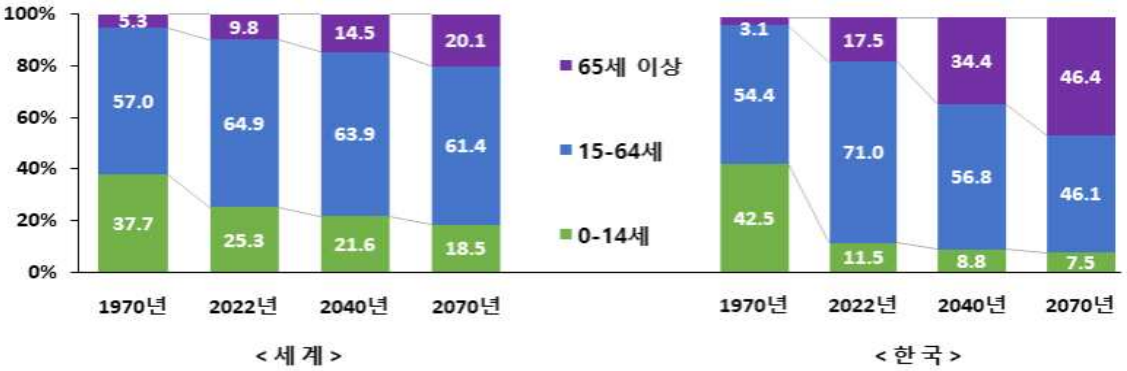


〈세계와 한국의 인구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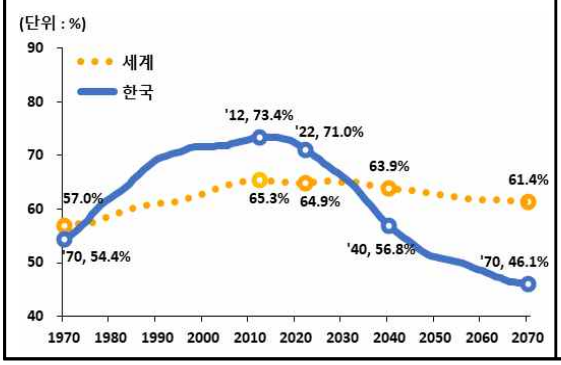


❍ [고령인구 구성비] 세계 인구 중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2년 9.8%에서 2070년 20.1%로 증가 / 한국 인구 중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2년 17.5%에서 2070년 46.4%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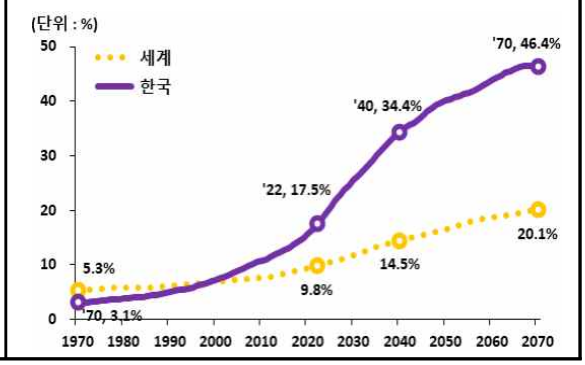
▌세계와 한국의 인구구조▐



〈세계와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추이〉



〈세계와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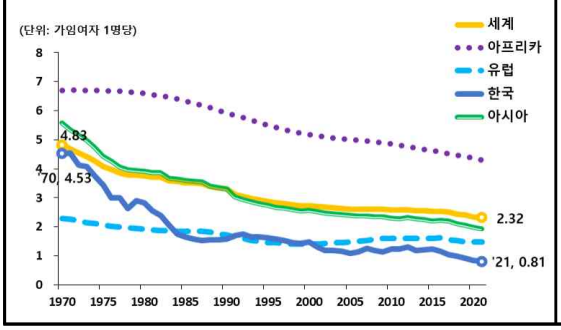
❍ [합계출산율] (세계) 2021년 2.32명으로 1970년 4.83명에 비해 2.51명 감소 / (한국) 2021년 0.81명으로 1970년 4.53명에 비해 3.72명 감소

- (국가별 순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으로 세계 국가(지역) 중 89위 수준이었으나, 2000년 32위 수준으로 합계출산율이 낮아지며, 2021년(0.81명) 홍콩을 제외하면 세계 국가(지역)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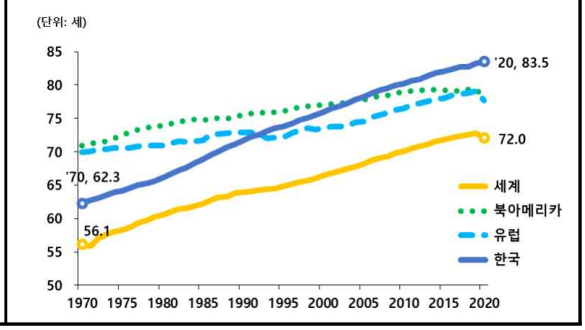
○ [기대수명] (세계) 2020년 72.0세로 1970년 56.1세에 비해 15.9세 증가 / (한국) 2020년 83.5세로 1970년 62.3세에 비해 21.2세 증가

- (한국)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로 세계 국가(지역) 중 116위, 2000년 50위로 상승한 후 2020년에는 상위 6위 수준(83.5세)으로 높아진 것으로 추정

〈세계와 한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세계와 한국의 기대수명 추이〉



○ [총부양비※] (세계) 총부양비는 2022년 생산연령인구 1백 명당 54.0명에서 2070년 62.9명으로 2022년 대비 1.2배 수준으로 증가, (한국) 2022년 40.8명에서 2070년에는 116.8명으로 2022년 대비 2.9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생산연령인구 1백 명당 부양인구(유소년인구+고령인구)의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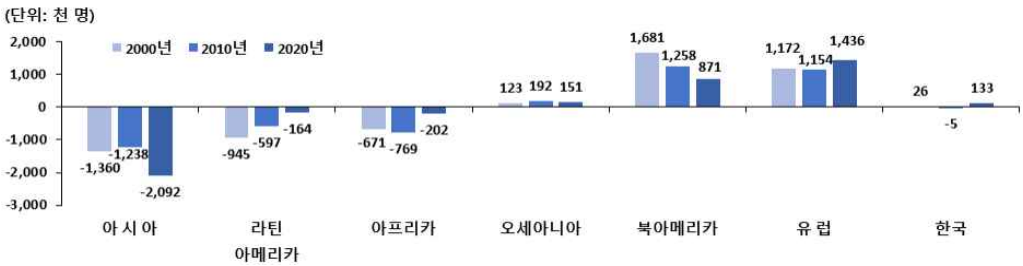
○ [노년부양비※] (세계) 2022년 15.1명에서 2070년 32.7명으로 2022년 대비 2.2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한국) 2022년 24.6명에서 2070년 100.6명으로 2022년 대비 4.1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생산연령인구 1백 명당 고령인구의 비

○ [중위연령] (세계) 2022년 30.2세에서 2070년 38.8세, (한국) 2022년 45.0세에서 2070년 62.2세로 높아질 전망

○ [국제순이동] 2000년, 2010년, 2020년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대륙 국가의 국제순이동은 순유출, 북아메리카 및 유럽 국가는 순유입으로 추정, 한국은 2000년 2만 6천 명 순유입, 2010년 5천 명 순유출, 2020년에는 13만 3천 명 순유입

▌대륙별 국제순이동 추이, 2000년, 2010년,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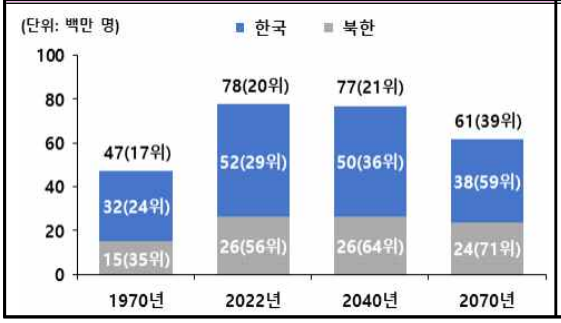
❑ 남한과 북한

○ [남북한 인구규모] 남한과 북한을 합한 총인구는 2022년 7천 8백만 명에서 2070년에는 6천 1백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북한 인구는 2022년 2천 6백만 명에서 2070년 2천 4백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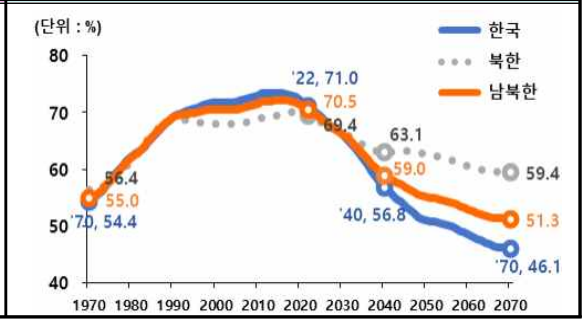
○ [남북한 인구구조] 남한과 북한을 합한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2022년 70.5%, 2070년 51.3%로, 한국에 비해 2022년에는 0.6%p 낮아지나, 2070년에는 5.2%p 높아질 전망

- 남한과 북한을 합한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2년 15.5%, 2070년 38.5%로 한국에 비해 2022년에는 19%p, 2070년에는 7.9%p 낮아질 것으로 전망

〈남북한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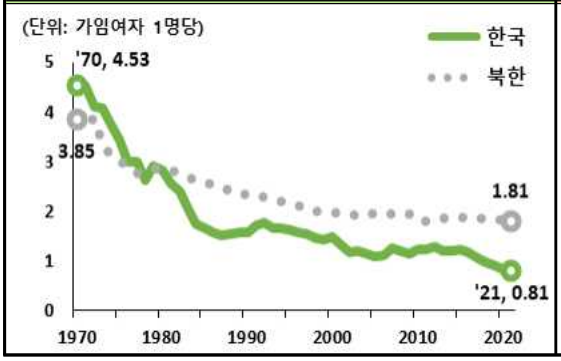
〈남북한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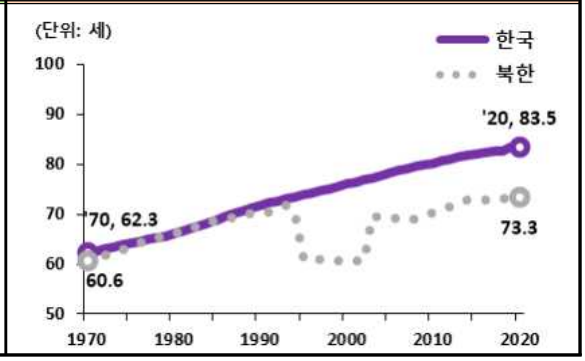
○ [합계출산율] 북한 합계출산율은 1970년(3.85명)에는 한국보다 0.68명 낮았으나 2021년(1.81명)에는 한국(0.81명)에 비해 1.00명 높은 것으로 추정

○ [기대수명] 북한의 기대수명은 1970년(60.6세)에는 한국보다 1.7세 낮았으나 2020년(73.3세)에는 한국(83.5세)에 비해 10.2세 낮은 것으로 추정

〈남북한 합계출산율 추이〉



〈남북한 기대수명 추이〉



2022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자료 : 통계청(2022.9.7.)

❑ 개요

○ [통계청, 2022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 발표, 2022.9.7.] 농산물 수급 계획, 농산물 가격안정, 농업소득 추계 등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 (조사대상 표본 수): 1,024개 표본구역, (조사기간) 수확기(5월 상순~8월 하순), (조사항목) 3㎡당 감자 중량(20g 이상, 20g 미만), 피해 상황 등

❑ 조사 결과

○ [2022년 봄감자 생산량] 30만 3,243톤, 전년(37만 9,671톤) 대비 7만 6,428톤(-20.1%) 감소

- (감소 원인) 전년 대비 재배면적은 감소하였고, 긴 가뭄의 영향으로 단위면적 당 총생산량 감소

- (시도별※) 충남(4만 8,599톤, 전국 생산량 중 16.0% 차지) > 강원(4만 6,947톤, 15.5%) > 경북(4만 6,509톤, 15.3%) 순

※ 2021년: 경북(6만 4,104톤, 전국 생산량 중 16.9% 차지) > 충남(6만 2,453톤, 16.4%) > 강원(5만 4,629톤, 14.4%) 순

▌연도별 봄감자 생산량 및 재배면적 현황(단위: 톤, ha, kg)▐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전년 대비(%)
생산량(톤)	367,363	393,670	321,518	385,244	465,948	376,349	379,671	303,243	-20.1
재배면적(ha)	14,545	15,259	14,943	15,819	18,150	16,339	14,266	13,018	-8.7
10a당 생산량(kg)	2,526	2,580	2,152	2,435	2,567	2,303	2,661	2,329	-12.5

○ [2022년 봄감자 재배면적] 1만 3,018ha, 전년(1만 4,266ha) 대비 1,248ha(-8.7%) 감소

- (감소 원인) 전년 인건비 상승 및 노동력 확보 어려움으로 재배면적 감소

○ [2022년 봄감자 10a당 생산량] 2,329kg, 전년(2,661kg) 대비 332kg(-12.5%) 감소

- (감소 원인) 비대기(5월) 봄가뭄 피해 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단위면적당 생산량 332kg/10a 감소

통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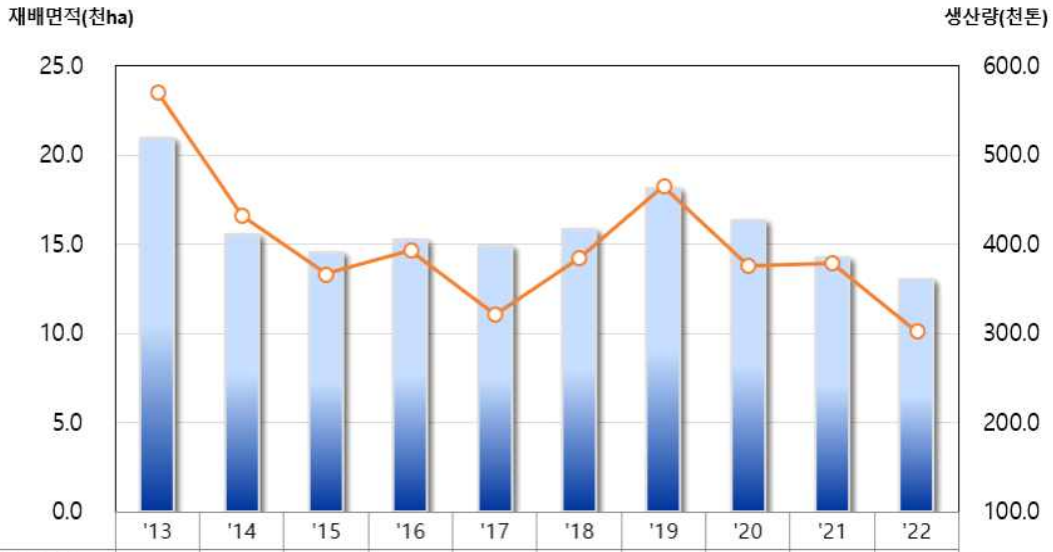
※ 5월 평균 일조시간: (2021) 210.8hr → (2022) 301.9hr [91.1hr↑]

※ 5월 평균 강수량: (2021) 140.7mm → (2022) 5.8mm [134.9mm↓]

※ 피해율※※(전체): (2021) 28.4% → (2022) 54.6% [26.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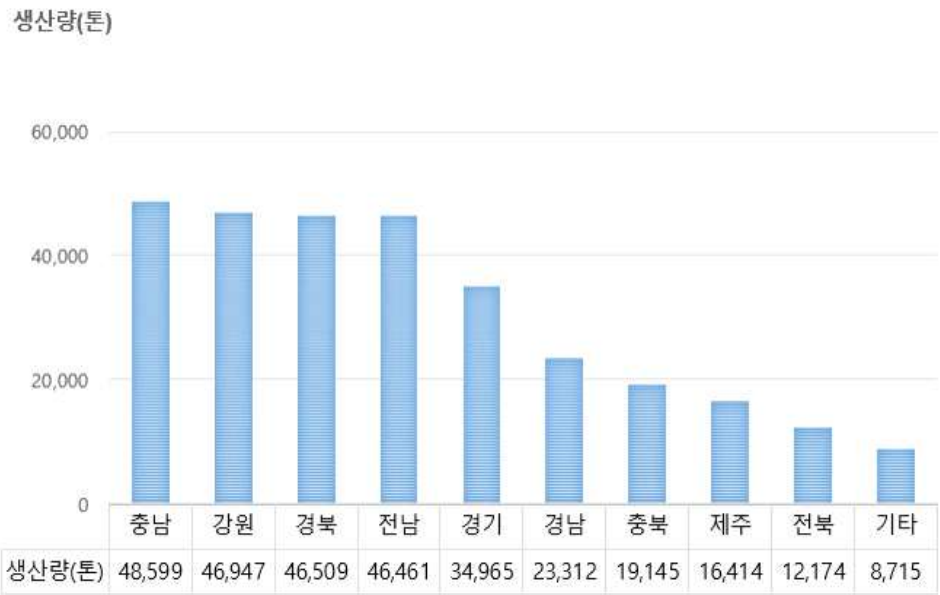
※※ 피해율: 표본대상에서 생산량이 10% 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표본 수의 비율

▌연도별 봄감자 재배면적 및 생산량▐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재배면적(천ha)	21.0	15.6	14.5	15.3	14.9	15.8	18.2	16.3	14.3	13.0
생산량(천톤)	571.0	432.3	367.4	393.7	321.5	385.2	465.9	376.3	379.7	303.2

▌2022년 시도별 봄감자 생산량▐



	충남	강원	경북	전남	경기	경남	충북	제주	전북	기타
생산량(톤)	48,599	46,947	46,509	46,461	34,965	23,312	19,145	16,414	12,174	8,715

※ 기타: 인천, 울산, 대구, 세종, 대전, 부산, 광주, 서울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